집권여당 최악 참패 왜

失政 심판론·朴대표 피습 결정타

한나라당 각종 악재 불구 보수층 결집 강화
'광주사태' '부산정권' 발언 호남 민심 이반

5·31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악의 여당 참패는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선거 도중 터진 이원영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 등으로 호남 민심이 돌아섰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사상 최악의 여당 참패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민심 이반을 꼽았다. 국민들이 경제침체 속에서 여권이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개혁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는 등 국정운영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지방선거를 통해 내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유권자들의 성향을 보수측으로 기울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는 최연희 의원 성추행 파문이나 김덕룡, 박성범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한나라당에 악재가 생길수록 보수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반영한다. 한국리서치의 지난달 23~24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승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26.4%), 열린우리당의 무능(20.2%), 을 꼽았다.

이번 선거를 중앙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심판으로 규정한 한나라당의 전략이 먹혀든 셈이다. 결국 광범위한 반여 정서는 여권의 어떤 전략이나 정책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백약이 무효였다"며 "지방선거 결과는 여권의 국정운영이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원영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정권' 발언 및 선거 막판 김두관 최고위원의 정동영 의장 비판 등 내분 양상까지 터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특히 이원영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 이후 나타난 호남 민심 이반은 열린우리당의 지역적 기반마저 파괴시키면서 여당의 참패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일이 임박하자 광주와 전남을 집중 공략하며 '집토끼' 사냥에 나섰지만 돌아선 호남 민심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은 한나라당 압승 구도를 다지는 결정타가 됐다.

특히 대전, 제주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막판 역전에 나선 것은 박 대표 피습 사건의 영향 말고는 설명할 요인이 없다는 분석이다.

우리당은 선거 막판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고 읍소했지만 민심은 이미 멀어진 상태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론은 여당의 모든 반전 시도를 무력화 시켰다"며 "현재의 열리우리당으로는 추후 정국을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계속 낮은 지지율이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집권당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의 경우 전통적인 열린우리당 지지층조차 이탈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지난달 31일 국립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종로구 청운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박광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당선이 확정된 1일 새벽 민주당 광주지역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도 이날 지지자들과 함께 목포의 선거사무실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큰 그림' 바꾸기 보다 분위기 쇄신 주력할 듯

盧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집권 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으로선 총체적인 민심이반의 결과라는 선거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에 대처해야 하고, 집권후반기를 맞아 달라진 정치환경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여권발 정계개편 가능성 등과 맞물려 앞으로 전개될 정국구도 속에서 노 대통령이 취할 선택의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심을 더하는 대목이다. 자칫 노 대통령이 제시하는 '해법'이 역풍을 초래할 경우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하며 주요 정책과제 수행이 쉽지 않는 지리멸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기간 내내 정치 현안에 대해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한 것도 지방선거 이후 정국상황이 예측불허의 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취할 국정운영 해법을 놓고 관측은 두 갈래로 엇갈린다.

하나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도 여당 등 정치권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해결에 전념하겠다는 관측이고, 다른 하나는 여당의 진로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후자의 경우, 특히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부산정권' 발언에 이어 이강철 정무특보와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 등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당지도부 비판이 이어지면서 탄력이 붙어 있다.

대연정 무산 이후 노 대통령이 취해온 국정운영 기조와 차기 대선을 1년반 앞둔 단임 대통령의 정치공학적 한계를 고려해볼 때 노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 배경으로는 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데다, 여당의 핵분열을 전제로 한 정치권 이합집산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장 여당부터 어떤 식으로든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될 조짐이 뚜렷하고, 결국 그러한 인식이 여권을 관통하는 큰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데도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럴 경우 대통령의 여당 당적 보유마저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 또한 노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이 판단할 부분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당 망연자실 한나라 표정관리
민주 "텃밭 사수"…민노 "기대 이하"

각 당 표정

5·31 지방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등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오후 여야 각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표정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은 31일 저녁 선거결과가 참패로 나타나자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오후 6시 일제히 발표된 방송사 당선예측 및 출구조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북지사 1곳만이 당선 예상 지역으로 나오자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무거운 침묵으로 일순 빠져들었다.

정동영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혁규 김근태 조배숙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그토록 우려했던 '한나라당 싹쓸이'가 현실로 다가오자 할 말을 잊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수성'(守城)을 자신했던 대전마저 오차범위 내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초조감이 더한 듯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31일 저녁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호남지역 3곳과 초접전지인 대전, 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하고 11개 지역에서 압승이 예상되자 마치 잔칫집과도 같은 들뜬 분위기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전 종반까지도 열세지역이었던 대전과 제주 2곳에서 자당 후보가 오차범위내 승리가능성이 점쳐지자 4년 전 세웠던 광역단체장 11곳 석권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당선예상 지역에서 후보들이 5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보인것으로 방송3사의 예측조사 결과에서 나타난데 대해서는 "명실상부한 압승"이라며 자축했다.

◇민주당=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2곳에서 승리하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전했다고 자평하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화갑 대표 등 지도부는 선거기간에 열린우리당의 공격적인 '광주 공략' 행보에 맞서 '텃밭 사수'를 자신해왔던 만큼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 여유있는 미소까지 머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막판 '전북 올인'의 배수진을 쳤던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정균환 후보가 우리당 김완주 후보에 비해 20% 포인트 가까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은 기대 이하의 선거 결과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울산 북구청장 1곳을 제외한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이 좌절되고, 기대를 걸었던 지방의원 비례대표 득표율도 목표치인 15%에 못미치는 10% 초반 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